

# 제42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지역대학,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송 선 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5월 23일(목)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전에 위치한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지역대학,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42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서거석 대교협 회장은 “고등교육은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과업으로, 지역대학이 어려워지면 지역의 발전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

을 것”이라 말하고, “정책포럼을 통해 대학과 지역에 대한 발전방향을 진지하게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문을 열었다. 이어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축사 대독에서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대학의 교육이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취업이나 창업,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지방대학들도 창의융합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인재 채용을 추진하여 지방대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개최장소인 충남대의 정상철 총장은 환영사에서 “지표상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교육의 현실은 어려운 실정으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기업과의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지역대학과 지역발전 간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재정책확 필요

첫번째 주제발표인 ‘재정지원·확충을 통한 지역대학 육성’에서 안규윤 교수(전남대학교 기획처장)은 “대기업 의존도 심화로 지방 중소기업의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역대학과 지역발전 간의 선순환 구조 유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하면서 지역대학 재정실태를 지역

대학의 학생 감소, 역외 유출(brain drain), 지역산업 위축, 반값등록금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의 영향 등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예산과 대학 선정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일례로 “2013년도 교육부 고등교육 분야 예산 중 주요 고등교육 사업예산을 살펴본 결과, 지난 5년 사이 증액된 고등교육 예산의 거의 전부가 등록금 부담완화에 투입되고, 학부생 교육프로그램에 투입된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설명하였다(등록금 인하여 투입된 국가장학금 총액이 2008년 3,821억 원에서 2013년 3조 2,297억 원으로 증가, BK21사업은 같은 수준으로 유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2,184억 원이 신설된 반면 학부생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준 NURI 관련사업은 2008년의 4,252억 원에서 2013년 2,607억 원(교육역량 강화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사업)으로 크게 감소함). 안 교수는 “지역대학들은 새 정부가 제시한 지역대학 관련대책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과 함께, “지방대학육성법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학재정지원 의무를 선언적 문구가 아닌 강행규정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속한 법안 제정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지역대학발전을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정부의 지원의지와 안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부대조건으로 지역대학의 적극적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의 안중석 연구위원은 “OECD회원국의 정부지원과 대학교육비 분석 결과, 정부지원 비중과 대학등록률의 부적 상관관계,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정부지원 비중의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료를 통해 예산제약으로 정부지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학생 수와 학생 1인당 교육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은 “학생 중심의 대학 교육비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의 적극적 협력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충남대학교의 천세영 교수는 “지역대학 문제에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먼저 한 가지 문제에라도 집중하기 위해서는 “GNP 1% 고등교육재정으로 추가 확보될 것으로 추정되는 연간 6조 원 전액은 지역대학부터 반값등록금 정책 실현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지역대학들의 가격경쟁력을 되살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자구노력이 충분치 않은 대학들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은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천 교수는 “IMF를 지나면서 서울대학교와 지역대학 간 무한경쟁이 시작되

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은 출발점 차이를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한 평가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면서 재정격차가 급속히 벌어졌다. 지역대학들로서는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당시까지 누렸던 유일한 경쟁력이었던 상대적으로 낮은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곧바로 부메랑이 되어 지역 학생들의 서울이동으로 나타났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대학원생 자원의 서울 유출로 나타났다. 지역대학교수들의 연구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돌아왔다. 해법은 하나밖에 없다. 지역대학들의 가격경쟁력을 되살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 우수인재 유치→질 좋은 교육(성과)→ 양질의 인력양성 및 취업확대→ 지방명문대학 부활

이어진 ‘법·제도 정비를 통한 지역대학 육성’ 주제에 대해서는 교육부 지역대학 육성과의 신문규 과장이 발표하였다. 신 과장은 지방대학의 위기와 현실 상황을 진단하고, “현재 지방대학들은 ‘낮은 선호→입학성적과 경쟁력 약화→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교육성과 하락’이라는 부정적 순환(Negative Feedback)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였다. 교육부 정책의 비전 및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에서 “정부는 이러한 부정적 순환

을 선순환으로 전환하여 '우수인재 유치→질 좋은 교육(성과)→양질의 인력양성 및 취업 확대→지방명문대학 부활'로 이끌고자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적 명품 대학과 지역거점 강소대학 육성, 특성화, 지속가능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가칭)지방대학육성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대학육성법에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도와 대학입학 지역할당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지방대학 육성기금 설치 등을 검토하여 포함할 계획으로 정부부처, 지방대학, 정치권 간 긴밀한 정책적 협력을 바탕으로 법률제정과 후속조치를 준비하여 가능한 2014년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토론에서 김이수 위원(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무엇인가?, 지방대학의 발전모델(선도모델형, 혁신형, 노력형, 잠재형)이 타당한가?, 대학지원의 기본방향이 타당한가?,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정책목표가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교육의 형식화로 인한 인적역량 약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지방대학 발전모델은 대학이 공감하

는 가치에 근거하기 보다는 정부의 규제를 통한 강제적 구조조정 유도의 성격이 강하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대학지원의 기본방향은 일시적 지원보다 대학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부부처는 규제기관이라기 보다 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지방대학 특성화의 공간적 범위는 당연히 지역사회이므로,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목표는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지역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성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제시한 지방대학 육성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점, "보다 세부적인 지방대학의 분류방법을 도입하고 일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제안하고, 그 내용에 대해 "공공기관의 합의와 역할별 논란을 해소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과 평가자체를 위한 평가보다는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두 번째 토론에서 대구대학교의 김민희 교수는 "이제는 하도 회자되다보니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도 모르는 채 지방대학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인식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각인되고 있다"고 지적

하면서,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을 지방대학에서만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주제발표와 교육부의 법안에 대해, “정책목표는 ‘지방대학의 자율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두고 차별화된 재정지원을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법안이 특별법의 형태를 띠고서는 실질적 영향력이 적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법·제도의 내용에 대한 검토에서 “지방대학 육성지원위원회는 그 위상과 역할, 권한 위원 구성 등이 중요하므로 이를 범부처 국가차원의 특별위원회로 두고 실질적 권한을 보장할 것, 지방대학 교수참여 확대와 채용할당제 등은 적정비용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 대학에 대한 지원은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중심으로 할 것, 지역인재 선발은 대학 자율화의 하나로 둘 것,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구조조정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 등을 제안하면서, “위기를 교육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입학(input)→창의인재 양성(process)→지역취업(output)이 연계되도록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다음으로, ‘창의인재 양성과 활용을 통한 지역대학 육성’ 주제발표에서 박성익 교

수(경성대학교 상경대학장)는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함에 따라 창의인재가 필요하고,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의 학습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하면서 “지역경제력 약화와 수도권으로의 인재유출이 대학의 창의인재 육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창의인재 양성과 지역활용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입학(Input) → 창의인재 양성(Process) → 지역취업(Output)’이 연계되도록 지역대학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가칭)지역 미래인재 장학생 제도 실시,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지역대학 지원 정도’ 항목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유도, 지역인재의 유출정도와 연계된 정부의 ‘연대 기여금’ 제도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창의인재 육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연대 기여금(Solidarity Mechanism)이란 지역인재유출로 인해 지역경제에 발생하는 간접적 피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함).

이에 대한 토론에서 이병영 교수(한밭대학교 LINC사업단장)는 “창의인재 육성과 지역대학발전의 필연적 관계라는 발표자의 설명에 공감한다”면서 “창조경제와 괜찮

은 일자리 창출은 지역 및 중소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문제를 수도권이나 타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지역 고유의 창조경제 전략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창의인재 육성은 산학융합을 통해 실현이 가능한데, 성공적인 산학협력은 대학, 기업, 그리고 교수의 열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이것이 ‘지역대학과 산업의 상생’이라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의 비전으로 가시화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미래의 지역대학은 지역산업을 리드하는 ‘산학협력특성화 대학’이 존재이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스템 중심의 명사형에서 실천을 중시하는 동사형의 산학협력인 Dynamic 산학협력과 교육·연구·기업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는 Success 산학협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남대학교의 한정희 교수(전 호서대학교 취업지원팀장)는 “창의적 지역대학의 육성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둔 융합교육으로 집단지성의 활용, 기업가적 과정을 통한 Smart unique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지역대학은 창의성 구현의 공간(Creative Zone)으로 작용해야 하며, 지역대학 졸업생이 지역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충분히 지원해야 하고, 이러한 지원은 창조적 기초 자원확보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지역대학육성과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디딤돌로 창조경제와 창의인재육성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설 것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대학 육성방안에 대한 다양한 입장의 토론이 있었으나,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대학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대체적으로 지역과 대학의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때 각 대학의 특성화·개성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마흔 두 번째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대교협이 이원근 사무총장은 “현재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 모두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지역과 대학이 공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교협이 이러한 대학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활발한 정책제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약 200여 명 이상의 대학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학교육에 관한 여러 정책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지금, 대교협을 주축으로 주요사안을 검토·논의하는 기회가

보다 더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제안하였다. 하반기에도 이어질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의 이 같은 바람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 필자소개

**송선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원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교육행정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고등교육연구실 전문연구원, 일본국립고등교육정책연구소(NIER) 고등교육연

구부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고등교육정책, 대학조직, 동아시아의 교육정책 등이다.